

권성동 “김혜경 의혹 ‘7만8000원 사건’?...장발장 코스프레”

이재명 측, 전날 공지 통해 ‘7만8000원 사건’ 명명 “모든 혐의를 7만8000원으로 통쳐...국어적 범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씨의 전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7만8000원 사건’이라고 정의한 데 대해 “작은 잘못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 식의 장발장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 사건 언급은 전형적인 언어교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이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이투 해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노비화, 샌드위치장, 한우장, 소고기 배달, 12만원 결제 한

도,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등등”이라며 “이 모든 혐의를 ‘7만8000원’으로 통친 것은 국어적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김씨는 10년 넘게 선출직 공무원의 아내였다. 법인카드 유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범죄를 피하기 위해 무능을 자처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 배우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야말로 부부가 검경 합동수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참담한 상황에서도 배모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억울한 피해자인 양 정치적 청승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해괴한 조어(造語)를 만들어 범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양인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무겁다”며 “당대표 방탄조끼부터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부인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앞서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이슬비기자

尹대통령, ‘정치인’ 복지장관으로 기우나 민주, 중앙위서 ‘전당원투표’·‘직무정지’ 당헌 개정안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정치인’ 기용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복지장관 후보자 자리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김세연 전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 정책 연구부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 등을 올려놓고 검증 중이다.

특히 여론에서는 나 전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치는 중이다. 한 여론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100일이 지났는데도 내각이 완성되지 못한 데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나 전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로서 현재 공석을 채울, 충분히 무게감 있고 유의미한 인사”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투기 논란으로 문제가 됐

나경원·김세연·윤희숙 물망

던 서울 중구 신당동 55역원대 건물을 처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 보다 수월한 검증을 위해 밀착업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세연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분야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특히 개혁파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선정할 경우 내각 ‘쇄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경선 당시 바쁜 일정을 쫓아 윤 전 의원의 저서 ‘정치의 배신’을 읽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노출된 적도 있다.

대통령실도 차기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장관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으시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역량있는 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투표 찬성률 47.35%...의결 과반 못 넘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재석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전했다.

중앙위원 566명 중 430명이 참여해 투표율

75.97%를 기록했다.

개정안은 당헌 제3장에 ‘당의 최고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전원투표를 최고의결 요건으로 명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됐던 당헌 80조 ‘기소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 역시 ‘정치탄압’ 사유 등 제재 예외 적용을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도

록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질의안도 함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에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 부의장에 이용선, 최혜영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은 찬성 406명(94.42%), 반대 24명(5.58%)으로 의결됐다.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도 찬성 360명(83.72%), 반대 70명(16.28%)으로 통과됐다.

최이슬기자

김재원 “이준석, 온 세상 총기 난사...사태 더 악화”

“자신이 받은 비평의 10배 정도는 공격한다...강박관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로 지칭하고 ‘신군부’에 비유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마치 총기 난사하듯이 아무나 공격을 하고, 더군다나 자신이 받은 그 비평의 한 10배 정도는 공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인지 다시는 안 볼 듯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역이기 싫어서 전부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TBS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만 상대로 공격하는 것이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하거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표가 직접 구성한 윤리위원회가 권한이 강화되고 가동된 것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절대자 혹은 윤핵관이 개입했다고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자기를 쫓아내기 위해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계속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